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 내용분석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aggressive driving

김 상 호*

차 례

- | | |
|----------------|-------------------|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I. 실증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IV.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

• 국문요약 •

이 연구에서는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사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양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았다. 기사통합 검색시스템(www.kinds.or.kr)을 통해 199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61건의 분석대상 기사들을 추출한 후 내용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난폭운전은 오래전부터 신문의 관심을 받아왔고 2015년 난폭운전 금지조항 입법화 이후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난폭운전은 중앙지와 지방지 모두의 관심대상이나 초기에 비해 제도이후시기 보다 많은 기사들이 지방지에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는 사실보도의 형태를 통해 가장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넷째, 난폭운전 신문기사는 주로 경찰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에 의존하여 작성되고 있었다. 시기를 막론하고 전문가

참여는 저조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신문기사를 통해 개인차량에서부터 오토바이에 이르는 다양한 운전자들이 난폭운전 주체로 등장하였으나 일반 교통사고에 비추어보면 승용차의 과속대표, 승합차의 과잉대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신문 기사 중 난폭운전의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사는 약 61% 수준이었고 주요 원인들로는 운전자 행태와 의식 등 운전자 관련 요인들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난폭운전 대응방안은 최근 보다 활발하게 게재되고 있으며 운전행태 선진화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는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신문은 환경감시, 상관조정, 그리고 사회화 기능 등을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긍정적 대응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 주제어 : 난폭운전, 신문기사, 기술규범, 사실보도, 독자투고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는 2000년 29만여 건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22만여 건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사고의 감소는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 수의 감소를 동반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로 위 안전상황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자동차 보유대수 1만 대당 사고율이 2.0명으로 주요 선진국(노르웨이 0.4명, 영국 0.5명, 일본 0.5명)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동 사고율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34개국 중 32위에 해당한다.¹⁾

실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감소추세와는 무관하게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 수준은 보다 열악할 수 있다. 국내 운전문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요즘 도로 위에는 지킬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도로문화는 문제가 있다”와 같은 문항들에 대해 응답자의 69.8%, 68.1%가 동의하는 반면, 5.0%, 4.7%만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²⁾

그동안 교통사고나 도로에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행위들이 도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고 이들은 도로교통법령 등을 통해 규제 대상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 행태를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운전자들의 난폭한 행위들은 과거부터 존재했으나 이들에 대

1) 국토교통부, 2017년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국토교통부, 2017, 3쪽.

2)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로드레이지 관련 인식조사, 2014, 101, 109쪽.

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난폭운전이 이례적인 행태가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상적인 것으로 법집행을 통한 규제 필요성이 보다 커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컸다. 2013년 8월, 차선시비 끝에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유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다. 이후 유사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이는 난폭운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처럼 언론은 특정 사회문제가 공중의제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언론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사회적 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흡연이나 음주 장면들에 대한 규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해당 행위의 증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예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동시에 모방효과도 확인되기 때문이다.³⁾ 그러므로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언론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언론의 대응은 특히 중요하다. 학계를 비롯해 심층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 내용은 정책적 처방의 주요 내용들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과 공공정책의 목표는 종종 상이함을 보여준다. 언론은 특이한 것, 예상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극적인 사건 등을 강조하는 반면 정책은 추세와 유사성 등을 중시하기 때

3) T. Niederkrotenthaler, M. Voracek, A. Herberth, B. Till, M. Staruss, E. Etzersdorfer, B. Eisenwort & G. Sonneck, "Role of media reports in completed and prevented suicide : Werther v. Papageno effec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7(2010), pp. 234-243.

문이다.⁴⁾ 특히 사건사고와 관련된 언론의 편향성은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언론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8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토록 제도적 준비를 단행했다. 경찰을 비롯한 정책부서들에서는 난폭운전 등에 대해 개인 운전자들의 문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려는 일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⁵⁾ 새롭게 도입된 금지 규정, 처벌 수위 강화, 단속 강화 등과 같은 여러 정책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안일선에서는 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이로 인한 자의적 집행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또한 비슷한 혼란과 함께 합리적 대응방안 부재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양한 원인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언론, 특히 신문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난폭운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언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 기사는 정보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검증된 내용들로 이해되며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으로 평가되어 분석되어 왔다.⁶⁾

4) S. M. Connor & K. Wesolowski, "Newspaper framing of fatal motor vehicle crashes in four Midwestern cities in the United States, 1999–2000," *Injury Prevention*, 10(2004), pp. 149–153.

5) R. G. Burns & M. A. Katovich, "Examining road rage/aggressive driving : media depiction and prevention suggestion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35, No. 5(2003), pp. 621–636.

6) 김상호,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련 기사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7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한 언론, 특히 신문의 기사내용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난폭운전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양상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난폭운전 현황

난폭운전, 보복운전, 위험운전 등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일탈적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개념규정과 대응방안 등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별적이거나 과거 운전문화의 영역에서 비공식적 처방을 통해 다루어왔다면 점차 제도화를 통한 공식 처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1월 현재, 총 15개 주들이 난폭운전을 규율하는 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⁷⁾

우리나라에서도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아 2015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 난폭운전에 대한 실제 법집행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이루어졌다. 2016년 한 해 동안 112 신고 및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총 11,722건의 난폭운전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총 997명이 검거되어 형사입건 되었다.⁸⁾ 신고내용 중 상당 부분은 단순 법규위반으로 처리

2017, 35-36쪽.

7) http://www.ghsa.org/html/stateinfo/laws/aggressivedriving_laws.html(2018. 1. 5. 검색).

되었다고 한다. 신고 건수와 형사 입건율의 괴리는 난폭운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개념 혼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행 2년 차인 2017년, 난폭운전으로 입건 된 사례는 총 3,511명으로 증가했다.⁹⁾ 수사진행 중이거나 미종결 사안 등이 포함되어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단속과 처벌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을 근절하고자 한 정책목표는 현실에서 상당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념에 대한 혼란과 함께 관련 행위의 급증은 이를 일부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신문(기사)의 분류와 기능

신문은 지리적 배포 범위나 발행 목적, 간격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신문기사 또한 형식에 따라 일정하게 분류되고 있다. 먼저, 신문은 중앙과 지방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개 중앙지는 수도권에 있는 일간지를, 지방지는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가리킨다. 지방지는 지역지(지역신문)로 사용되고도 있다.¹⁰⁾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환경감시(비판), 상관조정, 사회화, 그리고 오락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¹¹⁾ 환경감시는 주위에서 발생하는

8) 경찰청, “2016·2017년 난폭운전 단속수사 결과 분석”, 경찰청 내부자료, 2018.

9) 위의 자료.

10) 고영철, “한국 지방일간지의 기능 및 역할 가정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6호, 2003, 165-193쪽; 임영호, 신문원론,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2.

11) 이강수, “언론매체의 기능: 사회적 기능”, 언론학 원론, 한국언론학회(편), 2005, 375-391쪽.

사건 소식이나 정보 등을 수집해서 전달하는 활동을, 상관조정은 다양한 사건이나 정보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해설 평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활동이다. 사회화(교육) 기능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등을 전달하는 활동을, 오락기능은 즐거움이나 휴식 제공을 통해 심리적 보상이나 긴장을 해소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지방지 또한 이와 같은 기능들을 중심으로 지역성 혹은 지역이익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언론 매체가 지역사회를 선도하거나 주민욕구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이 미약하고 성숙되지 못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¹²⁾ 지방지에 대한 실증평가 결과, 지방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홍보 수단, 주민여론의 대변자, 신속한 정보 제공자 역할은 잘 수행하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역적 합의 도출 및 대안 제시, 환경감시자(비판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도 있다.¹³⁾

다음으로, 신문기사는 사실 보도, 해설, 논설, 칼럼, 기획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⁴⁾ 사실 보도(straight news)는 6하 원칙에 맞춰 사실 위주로 구성된 기사이다. 해설은 객관적 판단을 토대로 발생한 사실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고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는 기사를, 논설은 사설이라고도 하며 특정 사실에 대한 신문사의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는 기사이다. 논설이 신문사의 의견이라면 칼럼은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외부 필진들에 의해 게재된다. 주로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칼럼과는 다르게 일반 독자들이 지면에 참여하는 기사를 독자투고라 한다. 기획기사는 주제를 정한 다음 취재에 돌입해 작성하는 기사로 심층보도 혹은 탐사보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정하성,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언론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5집, 2001, 31-44쪽.

13) 고영철, 앞의 글.

14) 윤석홍·김준옥, 신문방송, 취재와 보도, 서울 : 나남출판, 2000 ; 임영호, 앞의 책.

신문기사는 신문의 기능에 비추어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해설 기사 등이 단순 보도기사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기사라고 추론되고 있으며,¹⁵⁾ 탐사보도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보도 방식으로 평가받고도 있다.¹⁶⁾

기사는 다양한 정보에 의존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원 또는 취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취재원의 다양성은 기자의 성실성과 균형보도에 대한 자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⁷⁾ 특정 집단, 계층, 인물 등이 취재원으로 자주 등장하면 기사의 다양성이 훼손되며 이는 기사의 불완전성이나 편향성을 제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¹⁸⁾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을 비롯한 언론 전반이 매우 제한적인 수의 취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나타나고 있다.¹⁹⁾

3. 신문기사와 난폭운전

신문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신문기사가 난폭운전에 미치

15) 고영철,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 콘텐츠의 구성방식 비교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5, 10쪽.

16) 임영호, 앞의 책, 190쪽.

17) 이재경·김진미, “한국 신문기사의 취재원 사용관행”,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303쪽; 장호순, “한국 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 분석”,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181쪽.

18) 송상근,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5호, 2016, 37쪽.

19) 김재영, “취재원 활용 관행의 차이: 조선일보와 옥천신문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1호, 2006, 137-161쪽; 송상근, 앞의 글; 장호순, 앞의 글; 최진호·곽은아·한동섭, “전국언론과 지역언론의 취재원 활용 관행 비교 연구: 원전 파피야 사건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6, 214-241쪽.

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정보 등을 전달하는 환경감시 기능이다.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는 난폭운전 행태들에 대해 그 빈도와 심각성을 널리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궁극적으로 유사 행위의 감소를 지향하는 것이다.

난폭운전의 위험성과 처벌가능성 등이 언론을 통해 노출됨으로써 전반적인 운전행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V 뉴스의 경우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과속운전과 음주운전 의도에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 뉴스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잉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는 위험성에 대한 과대평가와 위험한 운전행위들에 대한 낮은 의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단순한 사실보도를 통한 전달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난폭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 보도들은 교통사고와 관련 과잉편향을 보이고 있으며(사망 또는 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들이 과다하게 대표되는 방식으로) 사고 내용 또한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10대 운전자 사고와 음주 관련 사고들은 과잉 반영되는 반면 날씨, 도로사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과소 반영되는 방식으로)이 지적되어 왔다.²¹⁾ 이에 따르면 난폭운전 또한 실제 도로에서보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20) K. Beullens & J. Van den Bulck, "New, music videos and action movie exposure and adolescents' intentions to take risks in traffic,"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 40, No. 1(2008), pp. 349-356.

21) D. L. McArthur, D. Magana, C. Peek-Asa & J. F. Kraus, "Local television news coverage of traumatic deaths and injuries," *Th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Vol. 175, No. 6(2001), pp. 380-384 ; K. Frost, E. Frank & E. Maibach, "Relative risk in the news media : a quantification of misrepres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7, No. 5(1997), pp. 842-845 ; S. M. Connor & K. Wesolowski, 앞의 글.

수 있다.

언론을 통한 (과잉)노출은 주의 환기와 경각심 제고, 이를 통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난폭운전에 대한 과잉노출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개인의 행동은 주관적 규범뿐만이 아니라 기술규범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란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중요한 타자들의 압력으로 사회적 영향을 대변한다.²²⁾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요구 등은 대표적인 주관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규범(descriptive norms)은 타인들의 현실적 행동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요한 타인들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다.²³⁾ 선행연구들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행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는 기술규범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건강위해행위들(음주, 흡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이 발견되었다.²⁴⁾ 과속운전 의도에도 당위규범보다 기술규범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신문기사는 주관적 규범뿐만 아니라 현실규범, 즉 기술규범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고 난폭운전에 대한 과잉노출은 모방효과를

22)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1991), pp. 179-211.

23) 이진우 · 손영곤,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광고PR실학연구* 제10권 제3호, 2017, 217-243쪽 ; C. J. Armitage & M. Conner,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2001), pp. 471-499.

24) A. Ravis & P. Sheeran, "Descriptive norms as an additional predictor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 a meta-analysis," *Current Psychology*, Vol. 22, No. 3(2003), pp. 218-233.

25) J. Cestac, F. Paran & P. Delhomme, "Drive as I say, not as I drive : influence of injunctive and descriptive norms on speeding intentions among young driver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23(2014), pp. 44-56.

통한 부정적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사실 위주로 구성된 사실보도에서 이러한 영향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과잉 편향된 난폭운전 신문기사는 현실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난폭운전에 대한 신문기사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사실보도의 확대를 넘어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은 자살 관련 신문기사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²⁶⁾

난폭·위험 운전 행태들의 매체 노출 수준을 통제하여 실험한 결과, 긍정적 내용들에 노출된 대상자들은 난폭운전을 비롯한 규범위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난폭운전 기사 작성 과정에서 자극적인 용어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며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난폭운전이 나오는 무관하며 특정 부류(대중교통, 대형차량 등)에 한정된 것인 양 왜곡하는 것도, 대다수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 양 과장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난폭운전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심층 분석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상관 조정하는 기능이다. 난폭운전의 원인과 결과는 언론의 역량만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다. 경찰을 비롯한 정책부서들에서는 운전행위를 개인 운전자의 문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자 하

26) T. Niederkroenthaler, M. Voracek, A. Herberth, B. Till, M. Staruss, E. Etzersdorfer, B. Eisenwort & G. Sonneck, 위의 글 ; WHO, *Preventing suicide : a resource for media professionals, update 2017*,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27) C. Havârneanu & S. Popușoi, “Does mass-media message influence aggressive and risky driving ? a pilot study,” *Romanian Journal of Experimental applied psychology*, Vol. 7, No. 1(2016), pp. 121-124.

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난폭운전에 대한 금지조항 신설과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은 이와 같은 동기가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징벌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전통적 접근만으로 교통문제들을 해소하기란 어렵다. 문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효율적 대안 수립이 요구된다.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의 과학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 사이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신화(myth)가 아니라 난폭운전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설이나 기획 기사를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하며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 다양한 정보원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운전행태와 난폭운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등을 전달하는 사회화 기능도 중요하다. 이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education)와도 연결된다. 단순히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전자 차원에서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도로에서 난폭운전 차량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합리적 대응방법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Ⅲ. 실증분석

1. 조사설계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사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양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에 게재된 난폭운전 관련 기사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변수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양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비교 혹은 경향성을 식별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²⁸⁾

신문기사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기사를 대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 검색시스템인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수집하였다. ‘난폭운전’이 제목에 포함되도록 지정하여 검색한 결과, 총 207개의 기사들을 추출하였다. 이들 중 동일 신문에 중복되거나 연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해외 유명인들의 난폭운전 사건 단신보도 등)을 제외하고 총 161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8) R. D. Wimmer & J. R. Dominick, *Mass Media Research*(Belmont, CA : Thomson Wadsworth, 2006).

2) 분석기준

신문기사를 활용한 내용분석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크게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인 부분은 발행연도, 신문사 유형, 기사 유형, 정보원 등이 주로 활용되었고 연구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연도는 해당 기사가 게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둘째, 신문사 유형은 카인즈에서 중앙지와 지역종합지로 유형화된 중앙지와 지방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중앙지에는 경향신문 등 총8종이, 지방지에는 경기일보 등 총25종이 포함되었다. 셋째, 기사유형은 사실 보도, 해설, 논설, 칼럼(독자투고), 그리고 기획기사로 구분하기로 한다. 넷째, 정보원은 기사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주체로 시민, 관계자(경찰, 정부 종사자 등), 전문가(학자, 연구원 등), 그리고 기자(정보원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 등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형식적인 기준들이 연구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내용적인 부분은 연구 목적에 따라 차별적이게 된다. 이 연구는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양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신문기사의 양 못지않게 그 내용이 시민들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난폭운전의 원인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난폭운전 당사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신문기사의 태도(편향성)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신문기사에서 난폭운전의 원인 및 대응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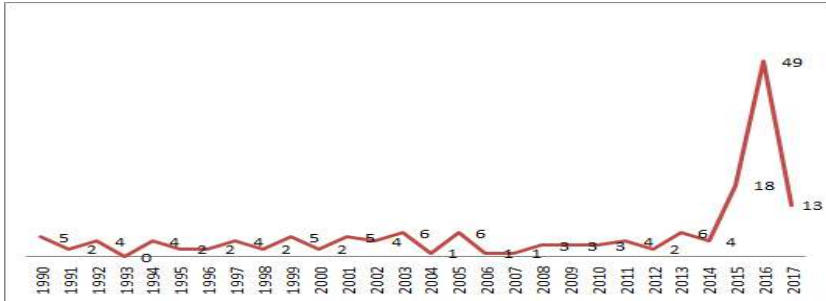
2. 분석결과

1) 형식 기준

먼저, 발행연도를 분석해 보았다. 난폭운전이 제목에 포함된 연구대상 신문기사 161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관련 기사는 1990년 이래 199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등장하며, 2015년부터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난폭운전 금지조항 신설이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이전, 무례하고 위험한 운전행위들이 ‘난폭운전’으로 포괄되어 평가되었다면 입법 이후부터는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이 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난폭운전이 보복운전과 비교되어 소개되고 처벌수위와 함께 대응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기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5년 8월 공포되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이후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 예정된 5월 말부터 해당 입법내용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이후 분석에서는 2015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제도이전시기와 이후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차이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전체 신문기사 중 85건이 이전시기, 76건이 이후시기에 기재되었다.

<그림> 연도별 신문기사 수



다음으로, 신문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난폭운전 기사는 전체적으로 중앙지에 32.30%, 지방지에 67.70% 기재되었다. 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중앙지와 지방지 비율이 8(24.24%) : 25(75.76%)임을 고려할 때, 난폭운전 기사의 중앙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도이전·이후 시기 모두에서 지방지 비율이 높으나 특히 제도이후시기에 보다 많은 기사들이 지방지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지의 이슈선점 역량이 지방지에 비해 뛰어나고 이는 초기 관련 보도내용의 집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앙지를 통해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소개되고 이것이 지방지로 확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난폭운전을 비롯한 운전행태는 일상의 문제이고 이는 지역 이슈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이후 지방지에서의 비중 확대는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소식이나 정보 등을 수집 전달하는 환경감시 기능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신문사 유형 분석

단위 : 건(%)

	이전시기	이후시기	계
중앙지	32 (37.65)	20 (26.32)	52 (32.30)
지방지	53 (62.35)	56 (73.68)	109 (67.70)
계	85 (100.00)	76 (100.00)	161 (100.00)

$$\chi^2 = 2.3561, df = 1, p. = 0.1248$$

다음으로, 신문에 기재된 기사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표 2〉 참조). 전체적으로 사실보도의 비중이 68.32%로 가장 높았고, 칼럼(24.84%), 기획기사(3.73%), 논설(2.48%), 해설(0.62%)의 순이었다. 사실보도와 칼럼이 93.16%를 차지해 사실상 대다수 기사가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양 시기 모두에서 사실보도와 칼럼 중심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제도이후시기에서는 사실보도의 상대적 축소와 칼럼의 상대적 확대 또한 볼 수 있다.

〈표 2〉 기사 유형 분석

단위 : 건(%)

	이전시기	이후시기	계
사실보도	63 (74.12)	47 (61.84)	110 (68.32)
해설	0 (0.00)	1 (1.32)	1 (0.62)
논설	3 (3.53)	1 (1.32)	4 (2.48)
칼럼(독자투고)	16 (18.82)	24 (31.58)	40 (24.84)
기획기사	3 (3.53)	3 (3.95)	6 (3.73)
계	85 (100.00)	76 (100.00)	161 (100.00)

$$\chi^2 = 5.4412, df = 4, p. = 0.2449$$

칼럼은 내·외부 필진들에 의해 주관적 판단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기

사이다. 칼럼 작성 주체를 분석한 결과, 경찰(57.50%), 시민(20.00%), 기자(10.00%), 기타(12.50%)로 나타났다. 제도이전시기에는 시민 비율이 50.00%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시기에는 경찰이 87.50%로 압도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는 사라졌다.

난폭운전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들은 대개 칼럼이나 논설 등과 같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기사들에서 나타났다. 제도이전시기에는 ‘살인운전’, ‘달리는 흥기’, ‘청룡열차’, ‘곡예운행’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었고 이후 경찰에 의해 ‘도로 위 혈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이후시기 지방지의 상대적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문사 유형을 기준으로 기사유형을 다시 분석해 보았다(<표 3> 참조). 중앙지의 경우 사실보도가 92.3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지의 경우 사실보도(56.88%)와 칼럼(34.8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난폭운전이 칼럼 형태를 통해 지역구성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칼럼 작성 주체가 대부분 경찰임을 볼 때, 주민 여론의 대변자로서의 기능보다 행정홍보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신문사 유형에 따른 기사 분석

단위 : 건(%)

	중앙지	지방지	계
사실보도	48 (92.31)	62 (56.88)	110 (68.32)
해설	1 (1.92)	0 (0.00)	1 (0.62)
논설	0 (0.00)	4 (3.67)	4 (2.48)
칼럼(독자투고)	2 (3.85)	38 (34.86)	40 (24.84)
기획기사	1 (1.92)	5 (4.59)	6 (3.73)
계	52 (100.00)	109 (100.00)	161 (100.00)

$$\chi^2 = 24.7735, df = 4, p. < 0.0001$$

다음으로, 신문기사의 주요 정보들이 누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지, 즉 정보원의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표 4> 참조). 전체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의 비중이 70.81%로 가장 높았으며, 기자(19.88%), 전문가(4.97%), 시민(4.35%)의 순서로 나타났다. 칼럼 작성 주체로서 경찰이 특별히 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들이 ‘기자’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관계자 비율은 70.81% 보다 높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원들이 제도이전시기에 활용되었으며 이후 관계자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정보원 유형 분석

단위 : 건(%)

	이전시기	이후시기	계
시민	7 (8.24)	0 (0.00)	7 (4.35)
관계자	57 (67.06)	57 (75.00)	114 (70.81)
전문가	3 (3.53)	5 (6.58)	8 (4.97)
기자	18 (21.18)	14 (18.42)	32 (19.88)
계	85 (100.00)	76 (100.00)	161 (100.00)

$$\chi^2 = 7.5204, df = 3, p. = 0.0570$$

2) 내용 기준

난폭운전을 다루는 신문기사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난폭운전 당사자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개인차량, 버스·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대형화물차, 오토바이 등 도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 중 난폭운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또한 16.15%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기사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니 대부분 독자투고(65.38%)와 사실보도(30.77%) 형식으로 기재

되었다. 해당 기사들은 난폭운전 입법 과정 혹은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소개하는 형태로 대개 경찰과 기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 난폭운전자가 언급된 사례들 중 전체적으로 개인차량운전자(28.57%)와 일반 시민(12.42%)이 40.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대중교통(23.60%), 대형화물차(6.83%), 오토바이(6.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도이전시기에는 대중교통과 대형화물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운전자들이 소개되었으나 이후 단순화됨과 동시에 난폭운전자의 특정 없이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난폭운전 당사자 분석

단위 : 건(%)

	이전시기	이후시기	계
시민(개인)	33 (38.82)	33 (43.42)	66 (40.99)
대중교통	29 (34.12)	9 (11.84)	38 (23.60)
대형화물차	8 (9.41)	3 (3.95)	11 (6.83)
오토바이(배달)	7 (8.24)	3 (3.95)	10 (6.21)
학원차량	4 (4.71)	0 (0.00)	4 (2.48)
대리운전	2 (2.35)	1 (1.32)	3 (1.86)
기타(견인 등)	2 (2.35)	1 (1.32)	3 (1.86)
언급 없음	0 (0.00)	26 (34.21)	26 (16.15)
계	85 (100.00)	76 (100.00)	161 (100.00)

$$\chi^2 = 44.7023, df = 7, p. < 0.0001$$

다음으로, 난폭운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다. 신문기사 중 난폭운전의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사는 전체의 60.87%인 98개에서 나타났다(〈표 6〉 참조). 시기별 차별성을 확인한 결과 제도이전, 이후 시기 모두

에서 60% 정도의 원인 제공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기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원인 제공 유무 분석

단위 : 건(%)

	이전시기	이후시기	계
언급 없음	34 (40.00)	29 (38.16)	63 (39.13)
언급 있음	51 (60.00)	47 (61.84)	98 (60.87)
계	85 (100.00)	76 (100.00)	161 (100.00)

$$\chi^2 = 0.0572, df = 1, p. = 0.8110$$

난폭운전의 원인이 제시된 신문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인들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표 7〉 참조).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원인들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 총 104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운전행태가 41.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전자 의식(19.23%), 참여자 행태(16.35%), 규제 관련(14.42%), 시간 제약(4.81%) 등의 순이었다. 운전행태와 참여자 행태, 시간제약, 운전자 의식 등은 운전자 관련 요인들로, 교통문화, 교통정체, 규제, 교통인프라 등은 환경 관련 요인들로 분류할 수 있다.²⁹⁾ 이에 따르면 신문기사에서는 난폭운전의 원인에 대해 운전자 관련 요인들이 81.74%, 환경 관련 요인들이 18.26%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제도이전시기에 보다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었고 이후 운전자 관련 요인들로 수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9) 원인들에 대한 분류는 “R. G. Burns & M. A. Katovich, 앞의 글”을 참조하였다.

〈표 7〉 원인 분석

단위 : 건(%)

	이전시기	이후시기	계
운전행태1)	19 (35.19)	24 (48.00)	43 (41.35)
참여자 행태2)	10 (18.52)	7 (14.00)	17 (16.35)
시간제약	2 (3.70)	3 (6.00)	5 (4.81)
운전자 의식3)	7 (12.96)	13 (26.00)	20 (19.23)
교통문화	2 (3.70)	0 (0.00)	2 (1.92)
교통정체	1 (1.85)	0 (0.00)	1 (0.96)
규제(제도) 관련4)	12 (22.22)	3 (6.00)	15 (14.42)
취약한 교통인프라	1 (1.85)	0 (0.00)	1 (0.96)
계	54 (100.00)	50 (100.00)	104 (100.00)

1) 차선시비, 법규위반, 음주 등 2) 모욕, 비난 등 수행과 무관한 행동들 3) 낮은 준법의식, 흥분, 분노, 잘 몰라서 등 4) 처벌규정 미약, 과당경쟁, 입법미비 등
 $\chi^2 = 12.3753$, $df = 7$, $p = 0.0889$

마지막으로, 난폭운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신문기사 중 난폭운전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사는 총 42.24%인 68개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상대적으로 제도이후시기에 대응방안 제공 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8〉 대응방안 제공 유무 분석

단위 : 건(%)

	이전시기	이후시기	계
언급 없음	55 (64.71)	38 (50.00)	93 (57.76)
언급 있음	30 (35.29)	38 (50.00)	68 (42.24)
계	85 (100.00)	76 (100.00)	161 (100.00)

$\chi^2 = 3.5567$, $df = 1$, $p = 0.0593$

신문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난폭운전 대응방안들은 <표 9>와 같다. 단속·처벌 강화가 3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전행태 선진화(15.00%), 선진교통질서의식 확립(15.00%), 경찰신고(13.75%), 교육(12.50%), 제도개선(11.25%) 등의 순이었다.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도이전시기, 가장 빈번하게 강조되었던 단속·처벌 강화가 이후 시기에서는 운전행태 선진화, 교통질서의식확립 등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경찰신고에 대한 강조도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대응방안 분석

단위 : 건(%)

	이전시기	이후시기	계
운전행태 선진화	1 (2.78)	11 (25.00)	12 (15.00)
선진교통질서의식	2 (5.56)	10 (22.73)	12 (15.00)
교육(홍보)	8 (22.22)	2 (4.55)	10 (12.50)
단속·처벌 강화	17 (47.22)	7 (15.91)	24 (30.00)
제도개선	6 (16.67)	3 (6.82)	9 (11.25)
경찰신고	1 (2.78)	10 (22.73)	11 (13.75)
기타	1 (2.78)	1 (2.27)	2 (2.50)
계	36 (100.00)	44 (100.00)	80 (100.00)

$$\chi^2 = 29.2899, df = 6, p. < 0.0001$$

IV.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신문기사들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난폭운전은 오래전부터 신문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왔고 2015년 난폭운전 금지조항 입법화 이후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도이전시기, 무례하거나 위험한 개별 운전행위들이 ‘난폭운전’으로 통칭되어 평가되었다면 제도이후부터는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입법 내용을 단순히 옮겨놓은 경우들이 많아 현실 상황을 운전자들이 법규내용으로 포섭하기란 쉽지 않게 느껴진다. 입법 초기 나타나는 개념 혼동이 신문의 역할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까지 지적되는 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자의적 집행의 문제를 상당기간 지속시킬 것으로 본다. 법령이 제정되어 집행되고 이에 따른 처벌 또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난폭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언론에서는 추상적인 법령 대신 이와 같은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법령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난폭운전은 중앙지와 지방지 모두의 관심대상이나 초기에 비해 제도이후시기 보다 많은 기사들이 지방지에 기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운전행위의 일상성과 지역성을 고려할 때 지방지로부터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폭운전 사건 사고의 전달과 예방, 그리고 합리적 대응수단들의 제시는 지방지 본연의 역할에도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지는 다양한 부정적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분석 결과 난폭운전에 대한 신문기사에서도 지역 경찰이 칼럼 주체로 등장하면서 행정홍보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등 지방지가 표출하는 역기능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은 지역 문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향후 지방지의 지역성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는 사실보도의 형태를 통해 가장 널

리 전파되고 있었다. 난폭운전은 대개 사건·사고란을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제도이전시기에도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일반시민들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제도이후시기, 경찰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는 주로 지방지를 통해 확산되고 있었다. 독자투고를 통한 적극적 의견개진은 주민 여론이 공론화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자극적 표현의 노출이라는 문제도 함께 지니고 있다. 또한 제도이후시기에는 시민의 참여는 사라지고 경찰이 핵심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입법 초기, 경찰은 정책 집행주체로서 관련 내용들을 전달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역할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달내용의 획일성과 반복성은 이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이 당분간 주요 칼럼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이전 전달 내용에 대한 보다 엄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입법 내용에 대한 단순한 소개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필요성 높은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난폭운전 신문기사는 주로 경찰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에 의존하여 작성되고 있었다. 제도이전시기 종종 나타났던 시민들은 이후 보이지 않으며 전문가 비율 역시 시기를 막론하고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관련 신문기사의 획일성과 심층성 부재로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을 비롯한 언론 전반이 정보원수의 한정성(소수성)과 정부 의존성이라는 문제를 표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러한 문제가 난폭운전 관련 기사에서도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정보원 활용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통한 객관성·과학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보도에서 전문가들의 표현 - 자살풍조(suicide epidemic)나 자살을 유발하는 사회적 압력의 증

가 등 - 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바,³⁰⁾ 전문가 의견이나 통계자료 등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문기사를 통해 개인차량에서부터 오토바이에 이르는 다양한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승용차가 중심이 되는 개인차량 운전자와 일반 시민이 40.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73.4%, 사업용 자동차가 22.2%, 기타 4.4%로 나타났다. 과실이 많은 '제1당사자'를 기준으로 승용차(66.9%), 화물차(12.0%), 승합차(6.4%), 이륜차(5.9%) 등의 순이었다.³¹⁾ 전반적인 교통사고에 비추어보면 난폭운전은 승용차의 과소대표, 승합차의 과잉대표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대형 화물차,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으나 이들의 과잉대표는 문제일 수 있다. 일반 운전자로 하여금 난폭운전이 자신과는 무관함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으니 향후 보다 균형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신문기사 중 난폭운전의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사는 약 61% 수준이었고 주요 원인들로는 운전자 행태와 의식 등 운전자 관련 요인들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도이후시기에는 운전자 관련 요인들의 비중이 94%까지 확대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이 온전히 운전자에게 전이되는 것은 합리적 분석이 될 수 없다. 난폭운전은 개인과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

30) T. Niederkrotenthaler, M. Voracek, A. Herberth, B. Till, M. Staruss, E. Etzersdorfer, B. Eisenwort & G. Sonneck, 앞의 글, 241쪽.

31) 국토교통부, 앞의 책, 55쪽.

다.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난폭운전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은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헐크’로 변하고 난폭운전으로 이어진다는 기사내용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마찬가지로 난폭운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과 도로관리기관의 관리 효율화 노력 등이 향후 신문 기사를 통해 보다 활발하게 제시·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폭운전 대응방안은 제도이후 보다 활발하게 기재되고 있으며 운전행태 선진화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는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제도이전,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요구되던 단속·처벌 강화, 제도개선 등의 조치들은 이후 운전행태·의식 선진화, 경찰신고 등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난폭운전에 대한 대응은 난폭운전자와 피해자, 그리고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대응방안들은 난폭운전 행위자와 일반운전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 유의사항은 경찰신고 정도에 머물러 있다.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기사들은 주로 경찰이 독자 투고의 형태로 참여한 기사들에서 나타났다. 피해자나 일반시민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신고만이 최선의 전략인 낭 오해되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자와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로에서 난폭운전 차량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합리적 대응방법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정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New York 주를 비롯해 미국 내 다수 도시들에서는 난폭운전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처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³²⁾ 향후 언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난폭운전 기사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긴장을 풀고 침착함을 유지하라.
- 안전하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
-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어라. 속도를 높이거나 차선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난폭운전자를 자극하지 말라.
-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모든 동승자에게도 벨트 착용을 요구하라.
- 눈을 마주치는 것은 피하라.
- 모욕적인 표현은 무시하고 되돌려 주려 하지 말라.
- 자동차 모양, 번호판, 장소 등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경찰에게 신고하라.
- 난폭운전자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정차한 후 경찰이 도착하면 목격하 내용을 진술하라.

지금까지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사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양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난폭운전은 경찰 등 관계자들을 주요 정보원으로 하여 사실보도의 형태로 전달되어왔다. 제도이후 이러한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지를 중심으로 경찰이 독자투고의 형식을 빌려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계에서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에서 권위 있는 정보원으로서 경찰의 참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달 내용의 확실성과 반복성의 문제 또한 지니고 있었다. 법집행에 따른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신문기사 또한 이들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와

32) <http://www.safeny.ny.gov/media/aggr-bro.htm>(2018. 1. 5. 검색).

함께 난폭운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난폭운전자와 마주했을 때 합리적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내용들이 보다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언론의 속성을 고려할 때 난폭운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 노출에 따른 모방효과와 억제효과 사이의 관계 및 이를 고려한 적절한 노출 수준 등은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논문접수 : 2018. 3. 30, 심사개시 : 2018. 4. 19, 게재확정 : 2018. 5. 16.〉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국토교통부, 2017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서울 : 국토교통부, 2017.

윤석홍·김춘옥, 신문방송, 취재와 보도, 서울 : 나남출판, 2000.

임영호, 2012, 신문원론, 서울 : 한나래출판사, 2012.

2. 논문

고영철,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 콘텐츠의 구성방식 비교 분석”, 언론 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5.

-----, “한국 지방일간지의 기능 및 역할 가정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언론 학보 제47권 제6호, 2003.

김상호,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련 기사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2호, 2017.

김재영, “취재원 활용 관행의 차이 : 조선일보와 옥천신문의 경우”, 한국언론 학보, 제50권 제1호, 2006.

송상근,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5호, 2016.

이강수, “언론매체의 기능 : 사회적 기능”, 언론학 원론, 한국언론학회(편), 2005.

이재경·김진미, “한국 신문기사의 취재원 사용관행”,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이진우·손영근,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인가?”, 광고PR실학연구 제10권 제3호, 2017.

장호순, “한국 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 분석”,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정하성,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언론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5집, 2001.
- 최진호·곽은아·한동섭, “전국언론과 지역언론의 취재원 활용 관행 비교 연구 : 원전 마피아 사건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6.

3. 기타

- 경찰청, “2016·2017년 난폭운전 단속수사 결과 분석,” 경찰청 내부자료, 2018.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로드레이지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보고서, 2014.

II. 외국문헌

1. 단행본

- Wimmer, R.D. & Dominick, J.R., Mass Media Research. Belmont, CA : Thomson Wadsworth, 2006.

2. 논문

-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991, pp. 179-211.
- Armitage, C.J. & Conner, M.,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2001, pp. 471-499.
- Beullens, K. & Van den Bulck, J., New, music videos and action movie exposure and adolescents' intentions to take risks in traffic.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0(1), 2008, pp. 349-356.
- Burns, R.G. & Katovich, M.A., Examining road rage/aggressive driving

- : media depiction and prevention suggestions. *Environment and Behavior*. 35(5), 2003, pp. 621-636.
- Cestac, J., Paran, F. & Delhomme, P., Drive as I say, not as I drive : influence of injunctive and descriptive norms on speeding intentions among young driver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23, 2014, pp. 44-56.
- Connor, S.M. & Wesolowski, K., Newspaper framing of fatal motor vehicle crashes in four Midwestern cities in the United States, 1999-2000. *Injury Prevention*. 10, 2004, pp. 149-153.
- Frost, K., Frank, E. & Maibach, E., Relative risk in the news media : a quantification of misrepres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5), 1997, pp. 842-845.
- Havârneanu, C. & Popușoi, S., Does mass-media message influence aggressive and risky driving ? a pilot study. *Romanian Journal of Experimental applied psychology*. 7(1), 2016, pp. 121-124.
- McArthur, D.L., Magana, D., Peek-Asa, C. & Kraus, J. F., Local television news coverage of traumatic deaths and injuries. *Th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75(6), 2001, pp. 380-384.
- Niederkrötenhaler, T., Voracek, M., Herberth, A., Till, B., Staruss, M., Etzersdorfer, E., Eisenwort, B. & Sonneck, G., Role of media reports in completed and prevented suicide : Werther v. Papageno effec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7, 2010, pp. 234-243.
- Rivis, A. & Sheeran, P., Descriptive norms as an additional predictor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 a meta-analysis. *Current Psychology*. 22(3), 2003, pp. 218-233.

3. 기타

http://www.ghsa.org/html/stateinfo/laws/aggressivedriving_laws.html
(2018. 1. 5. 검색).

<http://www.safeny.ny.gov/media/aggr-bro.htm>(2018. 1. 5. 검색).

WHO, Preventing suicide : a resource for media professionals, update
2017.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 ABSTRACT >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aggressive driving

Kim, Sang-Ho

This study analyzed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aggressive driving. Through the KINDS system, a total of 161 articles to be analyzed were extracted from January 1, 1990 to December 31, 2017,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content analysis.

First, it is discovered that the aggressive driving has been interested in the newspaper for a long time and it is being actively discuss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prohibition in 2015. Secondly, it is confirmed that the aggressive driving is described more in the local papers than in central papers. Third,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aggressive driving were most prevalent in the form of straight news. Fourth, the newspaper articles about aggressive driving were mainly based on the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Fifth, a variety of drivers from personal vehicles to motorcycles appeared in the newspapers as the subject of aggressive driving. Sixth, about 61% of articles reported on the causes of the aggressive driving, and the main causes were driver related factors. Finally,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ggressive driving are more actively described recently, and various methods ranging from the advanced driving behavior to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have been introduced.

The newspaper can act as a positive countermeasure against

aggressive driving through environmental monitoring, correlation adjustment, and socialization functions. Some ways to implement this functions effectively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 aggressive driving, newspaper article, descriptive norms, straight news, reader contribution